

# 재한 중국 이주민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2000년~2026년 국내학술지논문을 중심으로-

장지혜  
(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분석 대상 및 방법
  - 2.1. 분석 대상 및 자료 수집절차
  - 2.2. 분석 분류 기준
3. 연구 현황 분석
  - 3.1. 발행 추이 및 학술적 특성
  - 3.2. 연구 대상의 국적 및 이주 유형
  - 3.3. 주요 연구 주제 및 적응 층위 분석
4.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6년 1월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지 논문 총 841편을 대상으로, 재한 중국 이주민 연구의 현황과 방법론적 경향을 분석하고, 향후 이주·다문화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연구 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지난 25여 년간 파편화된 개별 연구를 통합 정리하여 연구 공백 지점을 규명하였다. 향후 이주민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중심의 연구 필

\* 이 논문은 202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5C2A02022622).

요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가 이주 유형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 및 다문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에** 재한 중국 이주민, 적응실태, 연구동향, 이주 유형, 토대역량

## 1. 서론

한국 사회는 글로벌화에 따른 인적 교류의 가속화에 따라 급격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8만 3,247명(전체 인구의 5%)으로 한국은 다문화사회에 본격 진입하였다. 이중 중국 국적체류자(한국계 중국인 포함)<sup>1)</sup> 외국인의 35.2%(980,670명)로 국내 최대 이주민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sup>2)</sup> 이들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결혼이민, 방문취업, 유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으며, 최근에는 전문직 근로자, 고령 이주민, 다문화 2세에 이르기까지 그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재한 중국 이주민은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공유한 동시에, 체류 자격에 따른 법적 지위의 파편화라는 독특한 사회적 맥락에 놓여 있다.

특히 지난 25년간 국내 학술계에서는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한 다학제적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왔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화교의 법적 지위와 국적 문제를 다룬 법·제도적 논의(이윤희 2004; 박상순 2006),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적응 과정(정기선 2008; 최혜지 2009) 등에 집중되었다. 2010년대 전후 유학생의 정보 리터러시와 학습 역량을 규명하는 연구(이수상 2009; 조용완 외 2010)를 비롯해, 한국계 중국인의 공간적 밀집과 지역사회 정주 실태를 다룬 연구(박세훈 외

1) 기존 연구에서 ‘한국계 중국인’은 ‘조선족’, ‘중국동포’ 등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의 개념에서 국적과 관련된 분류이기에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 ‘중국동포’라는 용어는 모두 ‘한국계 중국인’으로 통일해 사용하였다.

2) 법무부. 외국인 통계자료(출처: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검색일: 2026.02.05.)

2010; 이종구 외 2011)등으로 주제가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 후반에는 노동 시장내 차별 실태(이경상 외 2018)와 제노포비아 분석(박주연·한경근 2019)등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연구도 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2세 양육과 관련된 연구(강하라·도현심 2020)나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고령 이주민의 생애사 고찰(김진희 2024)등으로 연구대상과 방법이 다변화되고 고도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은 여전히 특정 집단에 치우쳐 있어, 급변하는 이주민 사회의 내부적 이질성과 능동적 주체성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6년 1월까지 게재된 제한 중국 이주민 관련 학술 논문들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검토 및 분석하여 향후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연도별 양적 변화추이와 방법론적 발전 과정을 파악하고, 학계의 대응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국적과 이주 유형, 주제와 적응 층위별 연구 비중을 분석하여 학술적 사각지대를 식별한다. 이를 통해 특정 집단에 편중된 연구들을 재검토하고, 그간 간과된 연구 영역에 대한 필요성을 도출한다. 셋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연구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나아가 '시혜적 적응' 중심의 기존 관점을 넘어 이주민의 '주체적 자립'을 강화할 수 있는 보편적 연구 지향점을 모색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학술지 논문을 수집하여 연도별, 유형별(이주유형·이주대상 등), 주제별, 연구 방법 및 학문 분야별, 적응층위별로 분류 및 유목화하고, 각 영역에 나타난 연구의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할 것이다.

## 2. 분석 대상 및 방법

### 2.1. 분석 대상 및 자료 수집절차

본 연구의 문헌 선정 및 분석 절차는 PRISMA 2020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논문 선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KCI 등재 및 등재 후보)에 게재된 학술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재한 중국 이주민 관련 연구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주된 검색 사이트로 활용하였고, 보완적으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국회도서관, 디비피아(DBpia) 등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병행 사용하였다. 특히 학술적 데이터를 총 망라하기 위해 발행 연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관련 문헌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검색 전략은 ① 이주 유형 및 현상, ② 연구대상(중국인·한국계 중국인·화교), ③ 연구 분야의 세 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 이주 현상을 포괄하는 정책적이면서 학술적인 용어인 '다문화'를 검색키워드에 포함하여 검색의 포괄성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른 주요 검색식은 [이주유형 관련어]AND[연구대상 관련어]의 조합을 기본으로 하여 교차 검색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검색어 조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검색어 조합 및 검색 편수

구분	검색 조합 및 편수
포괄적 범위	다문화 AND 중국(980편)
역사적이주	한국 이주 AND (중국인 OR 화교) (각 조합별 204편, 109편)
결혼이주	결혼이주 AND (중국동포 OR 한국계 중국인 OR 조선족 OR 중국인) (각 조합별 23편, 6편, 69편, 28편)
노동이주	노동이주 AND (중국동포 OR 한국계 중국인 OR 조선족 OR 중국인) (각 조합별 64편, 11편, 132편, 80편)
학술·교육이주	유학 AND 중국유학생(1,544편)

<표 1>에 따라서 검색된 문헌은 총 3,250편(최종 검색일: 2026년 2월 5일)이었다. 1차로 본 연구목적에 맞는 문헌만 선별하기 위해 제목, 초록, 주제어를 중심으로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목과 초록만으로는 연구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모호한 37편은 전문(Full-text)을

확보하여 2차 심층 검토를 진행하였다. 특히 초록상에서 연구 대상 및 연구 대상의 이주와 정착 실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한국 내 상황을 포함해 다른 연구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문헌들은 집중적으로 정독하여, 28편의 논문이 제외되었다.

이후 선정된 3,222편의 문헌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논문은 추가적으로 제외하였다. 첫째, 한국 내 중국인 이주 관련 연구가 아닌 중국 현지 상황이나, 제3국의 화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174편), 둘째, ‘언어학’, ‘다문화학’, ‘역사학’, ‘한국어 및 문화에 대한 교수법과 교육 방법론’, ‘예술·디자인’, ‘법·정책’ 등의 논문에서 다문화 현상을 서술하더라도 연구 본질이 한국 내 중국인 이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구(1566편), 셋째, 수집된 자료 중 단순한 시론, 서평, 잡지 기고문, 학술대회발표문, 비등재지 논문, 중복된 논문(641편) 등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000년부터 2026년 1월까지 발표된 총 841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최종 확정된 841편의 논문은 MS-Excel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자료 분석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분석 대상에 대해 2회에 걸쳐 반복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분류가 모호한 논문은 다시 한번 정독하여 최종 범주를 확정함으로써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 이주유형, 연구방법, 학문분야, 연구주제, 적응층위에 따라 범주화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편수와 비중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시기와 대상 간의 교차 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 2.2. 분석 분류 기준

관련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집단별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 현황을 도출하기 위해 수집된 문헌을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시기별 연구 추이와 학문적 접근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연도별 발행 편수, 연구방법, 학문분야로 분류하였다. 둘째, 제한 중국 이주민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어떻게 연구에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적과

이주유형별로 대상을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연구의 주제와 집단별 적응 관련 연구의 동향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5대 연구 주제'와 '5대 적응 층위'를 적용해 논문을 분류하였다.

### 2.2.1. 발행 추이 및 학술적 특성 분류 기준

우선 연구의 시기별 흐름과 학술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발행 연도의 시작 시점은 제한하지 않고 2026년 1월까지 발표된 논문의 연도별 발행 편수를 집계하여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각 학문 분야별 연구의 학문적 지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문 분야를 크게 사회과학, 교육학, 보건·의학, 인문·예술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연구목적과 주제의 지향점이 유사한 영역을 기준으로 이를 다시 4가지 핵심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학문 분야와 핵심 범주

학문 분야	핵심 범주
사회과학	'사회구조 및 정책·행정', '실천적 복지 및 생애주기', '공간·경제 및 교육·기타', '심리·상담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학	'교육정책 및 사회기조', '학습자 발달 및 심리지원', '교육과정 및 교수 학습', '평생·학제간 연계교육'
보건·의학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 '임상 및 재활의학', '간호 및 모성 보건', '식품 영양 및 생활과학'
인문·예술	'비평 및 문학연구', '인류학 및 문화연구', '디자인 및 생활과학', '예술치료 및 인문정신'

특히 다문화 연구의 실천적 영역과 제도적 영역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기 위해 사회구조를 다루는 일반 사회과학과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다루는 교육학을 구분하였다. 또한 분류의 객관성을 위해 논문 주제뿐만 아니라 게재지 성격, 연구 관점, 저자 소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 지원 역량을 다룬 연구(이재분·이해영·김혜

원 2009)는 ‘교육학’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에 대한 복지적 지지를 논한 연구(나동석 2009)는 ‘사회복지학(사회과학)’으로 분류하여 각 학문 영역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논문 한 편이 지닌 다학제적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학문 분야를 중복 집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 및 접근 방식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된 논문을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 혼합 연구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주요 연구방법과 연구목적에 따른 분석기법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기 위해 세부 유형을 재분류하였으며,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방법과 세부 유형

연구 방법	세부 유형
양적연구	‘설문조사 기반 통계분석’, ‘회귀·계량 통계 분석’, ‘구조방정식 및 고급 통계모형’, ‘대규모 데이터·빅데이터 실험연구’
질적연구	‘일반 질적 면담 및 주제 분석’, ‘해석적 및 구성적 연구’, ‘현장 및 사례 맥락 연구’, ‘전문 분석론적 연구’
문헌연구	‘법·제도 및 정책분석’, ‘이론적 고찰 및 비판적 담론 분석’, ‘현황 및 사례 비교 분석’, ‘체계적 및 텍스트 데이터 분석’
혼합연구	‘설문 및 면담 병행연구’, ‘현장 적용 및 실험 혼합연구’, ‘데이터 기반 심층 분석연구’, ‘특수 목적 혼합 연구’

### 2.2.2. 연구대상 분류 기준

재한 중국 이주민 연구의 특정 집단에 대한 편중성을 확인하고, 국내 유입 동기와 사회적 정착 양상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고자 연구대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재한 중국인의 내부적 이질성과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적 및 국적 배경(이하 국적)을 ‘화교’,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 ‘다국적’, ‘기타’의 5개 범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sup>3)</sup>

3) 재한 중국 이주민 연구는 화교,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중국내 모든 민족 포함), 다국적(중국 포함된 타국가와의 비교), 모든 외국인(한국인 포함) 등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통합하여 지칭할 때 국가 및 민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둘째, 이주유형은 ‘이주 동기 및 사회적 정착 유형’에 근거하여 5개로 재구성하여 분류하였다. 구체적 구분기준은 1. 이주 목적 및 성격으로 이주자의 한국 입국 동기, 2. 이주 시기와 역사적 정주성을 가진 화교의 특수성 반영, 3. 체류 자격으로 비자 유형을 연구목적에 맞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국적과 이주유형에 대한 분류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이주 유형 및 분류 기준

국적	내용	이주유형	내용
화교	연구대상이 재한 대만 국적 소유자와 역사적 정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	역사적 이주	화교와 관련해 역사적·사회적 정착 과정 및 정체성 형성을 다룬 연구.
한국계 중국인	연구대상이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 ‘중국동포’.	결혼이주	한중 수교 이후의 결혼이민자(F-6)와 동반 가족(F-1), 중도입국 자녀 등 가족 단위의 이주 및 정착을 다룬 연구.
중국인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의 모든 민족을 포함.	노동이주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자격을 지닌 노동자와 전문직(E계열) 종사자 등 경제활동 목적의 이주 현상을 다룬 연구.
다국적	중국인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 이주민을 통합적으로 다룬 경우.	학술·교육이주	유학생(D-2, D-4)의 유입 경로 및 한국 사회 적응을 다룬 연구.
기타	한국인의 이주자에 대한 인식 등.	기타	귀화자(국적 취득), 일시 체류자,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복합적·다층적 성격의 이주 연구. <sup>4)</sup>

4) 이주민 밀집 지역의 도시재생 및 공간정책, 미디어 내 문화적 재현과 차별, 유학생에서 노동자로 전환되는 복합이주 양상과 내국인의 수용성과 법적 지위 등 거시적 담론과 수감자·선교 등의 연구 등이 포함된다.

### 2.2.3. 내용적 분류 기준

본 연구에서 내용적 분류는 재한 중국 이주민 연구의 학술적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5대 주제와 5대 적용 층위에 따라 분류하였다. 우선 5대 주제는 양육, 노동,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생활 밀착형 적응지표’를 핵심 분석 틀로 설정하였다.<sup>5)</sup> 이를 바탕으로 연구목적과 다차원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통합·정책’, ‘문화·생활’, ‘경제·노동’, ‘교육·2세’, ‘지역사회’의 5대 연구 주제로 분류하였다. 연구 주제 분류를 위한 키워드는 재한 중국인 집단의 인구학적 특수성과 체류자격별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포괄성과 관련성의 원칙에 따라 선정하였다. 아래 <표 5>는 본 연구의 목적과 관점에 따라 설정된 5대 연구 주제별 핵심 키워드를 정리한 것이다.

<표 5> 연구 목적과 관점에 따른 5대 주제와 주요 키워드

연구주제	연구 주제별 주요 세부 키워드
사회통합·정책	‘다문화사회’, ‘시민권’, ‘사회적 배제’, ‘다문화정책’, ‘다문화 관련법’, ‘이주정책’, ‘사회통합’, ‘국적법’, ‘비자제도(H-2/F-4)’, ‘사회적 수용성’, ‘다문화 담론’ 등
문화·생활	‘문화적응’, ‘문화교류’, ‘이문화접촉’, ‘문화적 갈등’, ‘한국생활’, ‘심리적 안녕감(스트레스)’, ‘정체성’, ‘일상생활 실태’, ‘여가·문화생활’ 등
경제·노동	‘노동이주’, ‘경제이주’, ‘노동시장’, ‘고용’, ‘이주노동자’, ‘직무 스트레스’, ‘직업 정착’, ‘전문직 이주’, ‘이주민 경제활동’, ‘상권’, ‘노동권(인권)’ 등
교육·2세	‘이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아동’, ‘학교적응’, ‘교육경험’, ‘자녀 양육’, ‘화교학교’, ‘중도입국자녀’, ‘유학’ 등
지역사회	‘이주민 커뮤니티’, ‘지역별 이주민 사회’, ‘지역사회통합’, ‘외국인 밀집 지역’, ‘자조 모임’, ‘상호문화주의’ 등

5)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 밀착형 적응지표’는 법무부의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강조하는 이주민의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및 사회통합 실행 방향을 바탕으로, 통계청·법무부 공동 실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주요 설문 문항(가족생활, 고용조건, 지역사회 관계 등) 중 양육, 노동, 지역사회 참여 등 이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핵심 지표들을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명명하였다.

세부 키워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였다. 첫째, '사회통합·정책'은 이주민의 법적 지위와 직결된 시민권 및 비자 제도를 포함한다. 둘째, '문화·생활'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체성 변화 등 심리적 안녕감과 일상을 포괄한다. 셋째, '경제·노동' 영역은 단순 노무직을 넘어 전문직의 직무 환경과 창업 및 상권 형성을 통해 경제적 자립 실태까지 포함한다. 넷째, '교육·2세'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영유아기 자녀의 양육 실태를 포함하여 생활 밀착형 데이터의 누락을 방지한다. 다섯째, '지역사회'는 이주민 커뮤니티를 넘어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 내 이웃 관계와 사회적 통합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인지 여부에 중점을 둔다. 이성과 같은 5대 주제별 키워드는 앞서 제시한 이주유형 및 연구 대상 키워드와 교차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이주민을 둘러싼 생태체계적 환경을 얼마나 포괄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이주민의 적응을 기준으로 개인 역량 기반의 5대 층위로 분류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이것은 재한 중국 이주민 연구가 단순히 '적응'이라는 수동적 상태를 넘어, 이들이 가진 잠재적 자립 역량과 적응 실태가 어떠한 관점과 층위에서 연구되어왔는지를 고찰하고자 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적응지표는 기존 학술 담론과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도출한 조작적 정의에 근거한다. 우선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 이론을 통해 이주민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 학교, 지역사회, 국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층위별 상호작용을 분석틀로 삼았다. 또한 Amartya Sen(1985; 1999)의 역량 접근법을 반영해 이주민이 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선택하고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 자유와 기능'으로 작용하는 주택과 고용 같은 물리적 자원 등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Ager & Strang(2008)의 사회통합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성공적 통합의 핵심 지표인 성취 영역(고용, 주택, 교육, 건강)과 사회적 연결망을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류의 타당성 확보로 체류 자격과 배경에 따라 적응 양상이 상이한 재한 중국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생활 영역인 '개인·심리', '가족·일상', '경

제·직무’, ‘지역사회·관계’, ‘법·제도’의 5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학술적 근거 기반의 범주로 각 층위는 선행연구와 국가 통계 지표를 토대로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개인 및 심리적 적응’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가족 및 일상생활 적응’은 ‘2024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25)’의 항목을 ‘경제 및 직무적 적응’은 노동시장 성과를, ‘지역사회 및 관계 적응’과 ‘법적 지위 및 수용 환경’은 사회적 차별과 제도적 지원 환경(Berry 1997) 등을 포괄하도록 하였다. 셋째, 유목의 상호 배타성과 포괄성 유지이다. 각 논문이 하나의 범주에 명확히 귀속되도록 정의를 구체화하였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은 ‘가족 및 일상’으로, 이웃 관계는 ‘지역사회 및 관계’로 구분하여 데이터의 중복을 방지하고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설정된 5대 적응 층위의 세부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5대 적응 층위 및 관련 키워드

적응 층위	세부 키워드
개인 및 심리적 적응	<b>심리정서, 정체성, 문화 스트레스:</b>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체성 혼란, 우울감, 자아존중감, 신체화 증상 등
가족 및 일상생활 적응	<b>부모 역할, 양육 실태, 가족 관계:</b> 영유아기 자녀 양육, 부부 소통, 고부 갈등, 일상 가사 분담 등
경제 및 직무 적응	<b>노동 실태, 직무 스트레스, 상권 형성:</b> 전문직 및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노동권 보장, 임금, 고용환경, 이주민 상권 등
지역사회 및 관계 적응	<b>이주민 집거지, 자조 모임, 지역 사회 통합:</b> 중국인 밀집 지역의 특성, 자조 조직, 지역 내 이웃 관계, 공간적 적응 등
법·제도 적응	<b>정책 및 법제도, 사회적 인식:</b> 국적 및 비자제도(F-4/H-2), 다문화 정책, 언론 보도 및 담론 등

본 연구는 수집된 841편의 논문을 이상의 이러한 분류 체계에 근거하여 시기, 대상, 연구방법 및 학문 분야, 연구 주제 및 적응층위별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도출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제3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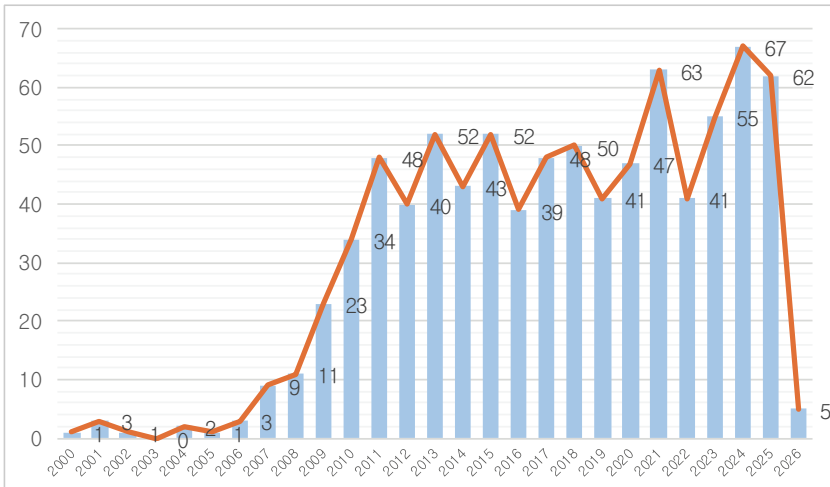
### 3. 연구 현황 분석

#### 3.1. 발행 추이 및 학술적 특성

본 절에서는 수집된 재한 중국 이주민 관련 연구의 시기별 성장 추이와 학문 분야 및 연구방법의 변화를 검토하여, 국내 관련 연구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3.1.1. 연도별 학술논문 발행 편수 현황

재한 중국 이주민 연구의 연도별 발행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한국 다문화사회의 변천과 학계의 대응 동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아래 <그림 1>은 2000년부터 2026년 1월까지의 연도별 연구 논문의 발행 현황과 그 추이이다.<sup>6)</sup>



<그림 1> 연도별 학술지 논문 발행 추이(2000~2026.01)

6) 2026년의 경우 1월 31일까지 게재된 데이터 5편만 반영된 수치임.

발행 추이의 분석 결과, 연구의 양적 변화는 국내외 사회적 사건 및 한국의 정책적 변화와 학계의 방법론적 관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연간 1~3편에 불과했던 연구는 2007년(9편)과 2008년(11편)을 기점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제정과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의 본격 시행으로 정책적 기틀이 마련된 가운데,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시행과 방문취업제(H-2, 2007) 도입에 따른 중국 동포 유입이 급증하여 학술적 관심 및 사회적 현안과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특성과 적응 실태(정기선 2008)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행정서비스의 대응성(이종열·범령령 2010) 등을 다루며, 재한 중국 이주민 연구의 외연이 확장되었다. 이와 함께 이주민 적응 패러다임이 단순 체류에서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며, 이재분·이해영·김혜원(2009)은 이주여성의 자립을 위한 ‘한국어’, ‘양육’, ‘관계’, ‘정보활용’의 4대 핵심역량을 제시하며, 적응의 개념을 수혜 중심에서 주체적 역량 중심으로 확장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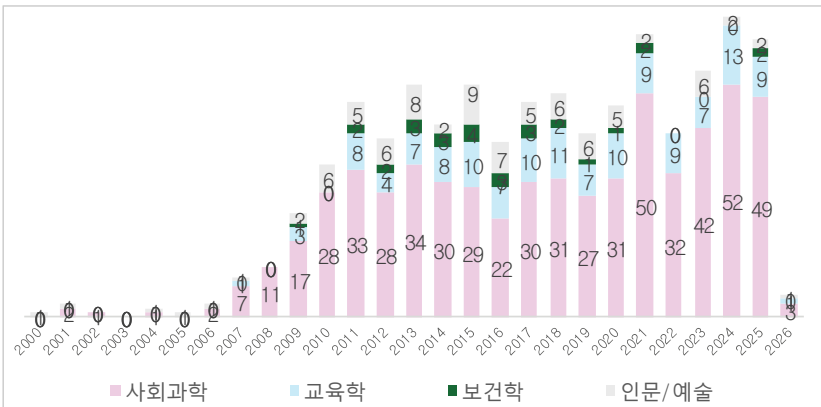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45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양적 팽창기에 들어서게 된다. 특히 2011년(48편)과 2013년(52편)의 높은 수치는 2010년 전후 유학생 유입 정책에 따른 유학생 유입의 급증과 다문화 2세들의 학령기 진입이라는 인구학적 변화가 투영된 것이다. 예를 들어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박혜숙 2011)나 결혼이주민들의 자녀 양육과 교육 연구(김수봉·심옥수 2013; 장갑수 2013)등은 정책 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연구이다. 한편 2016년(39편)의 일시적 감소는 사드(THAAD) 배치 등 한중 관계 마찰이 학계의 현지 조사 및 교류에 제약을 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18년(50편)과 2021년(63편)에는 연구 수치가 반등을 보였는데, 이 시기는 국내외적으로 혐오 정서의 확산과 이주민의 장기 체류에 따른 권리 문제가 학계의 화두가 된 때로

7) 연구 증가 배경에는 2004년 정부의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의 영향이 있다. 교과부는 2008년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발전방안’을 세워 2012년까지 유학생 1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재설정하고, 정부 초청 장학생 규모를 3,00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출처: 연합뉴스(2008). 외국인 유학생 2012년 10만명 유치, <https://buly.kr/7bjt1a>(검색일: 2026.02.10.))

연구의 내용 또한 이주민의 ‘단순적응’에서 ‘사회적 갈등과 권리’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다.<sup>8)</sup> 2024년(68편)과 2025년(62편)에도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팬데믹 이후의 뉴노멀과 기술 전환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는 연구의 성격이 ‘수동적 적응’에서 ‘메타적 통합 및 주체적 자립(전연화 외 2024; 이보람 2025)’의 단계로 고도화되었음을 시사한다.

### 3.1.2. 시기별 학문 분야 추이 및 분포 특성

제한 중국 이주민 연구의 학술적 분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학문 분야의 시기별 발행 추이와 주요 영역별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아래 <그림 2>는 학문 분야에 따른 연도별 발행 편수이다.



<그림 2> 학문 분야의 연도별 현황(2000~2026.01)

전체 연구 비중은 사회과학(592편, 70.4%)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어 교육학(134편, 15.9%), 인문·예술(86편, 10.2%), 보건·의학(29편 3.5%) 순으로 특정 학문에 대한 고도의 편중 현상과 시기별 분화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선 사회과학 중심의 연구방식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은 초기에는 정책 수립에 직결

8) 예를 들어 노동 시장 내 차별 실태(이경상 외 2018)나 온라인 혐오 및 제노포비아 분석(박주연·한경근 2019) 등이 있다.

되는 행정 및 복지 실태 분석에 연구 자본과 관심이 집중되었고, 2010년 전후로는 대학 내 중국인 유학생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해, 이들의 적응과 조직 몰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교육 서비스 및 경영학적 연구 수요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다. 이처럼 정책 제언과 결과의 일반화에 유리한 통계 기반의 양적 연구가 학계의 주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회과학 중심의 학문적 생산이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교육학 연구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연평균 약 12편이 꾸준히 게재되었는데, 이는 다문화 자녀의 제도권 교육 진입과 중국인 유학생의 학습 적응 기제에 대한 연구 요구가 투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인문·예술 분야도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연평균 약 6편 내외의 연구가 게재되었는데, 이 시기 연구들이 이주민의 정체성 형성, 문화적 재현, 그리고 예술치료를 통한 내면의 치유 등 미시적이고 정서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과학적 실태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 결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보건·의학 분야는 전체의 3.5%(29편)에 불과해, 25년이 넘는 연구 축적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신체 건강이나 의료 접근성에 대한 의학적 담론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재한 중국 이주민 연구가 사회과학적 적응 프레임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보건·의료 영역으로도 그 분야를 확장해야 하며, 이주민의 삶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학제적 균형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학문 분야별 구체적인 포함 분야와 관련 빈도 및 비중을 살펴 보겠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세부 학문 분야별 현황은 아래 <표 7>과 같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심리·상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36.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개인의 내면 기제 및 학교생활과의 상호작용과 관계되는 연구와 관련 있었던 부분으로 이러한 결과는 재한 중국 이주민 연구가 이들의 정체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등 개인의 내면적 심리 기제를 규명하는 데 매우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사회과학 분야의 세부 학문 분야별 현황

세부 분야	주요 포함 분야	빈도	비중
심리·상담 및 커뮤니케이션	심리·상담 연구,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 등	258	36.03
사회구조 및 정책·행정	사회·인류·문화 연구, 정치·행정·정책 연구, 범죄·경찰·법 연구 등	176	24.58
공간·경제 및 교육·기타	도시·지역·지리 연구, 교육 연구, 경제·노동 연구, 관광·여가 연구 등	160	22.35
사회복지 및 서비스	사회복지 및 복지정책, 가족·여성·아동 연구, 보건·의료 연구 등	122	17.04
<b>합계</b>		716	100

다음으로 사회구조 및 정책·행정(24.58%)과 공간·경제·교육·기타(22.35%)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 연구의 경우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제도적 분석과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 연구가 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복지 및 서비스(17.04%)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이는 정책이나 서비스 체계에 대한 논의에 비해, 실제 복지 현장에서의 실천적 모델이나 서비스 구체화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각지대임을 시사한다.

교육학 분야를 살펴보면 학습자 개별 심리와 거시적 정책 담론에 편중된 이분법적 구조를 띠고 있으며,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교육학 분야의 세부 학문 분야별 현황

세부 분야	주요 포함 분야	빈도	비중
학습자 발달 및 심리지원	유아·아동, 특수교육, 상담, 심리, 학생지도 등	95	37.8
교육정책 및 사회구조	교육사회·행정·정책, 다문화·사회통합 등	80	31.9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과·언어교육, 교육방법, 교육과정, 평가 등	54	21.5
평생·학제간 연계교육	평생교육, HRD, 여성학, 기타 학제간 연구 등	22	8.8
<b>합계</b>		251	100

세부 분야별로 보면 교육학과 관련된 연구들은 학습자의 내적 발달 및 심리적 적응(37.8%)과 거시적 교육 정책 및 사회적 기초(31.9%) 규명이 높은 비중이다. 이는 이주민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연구가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실제 지식 전달을 다루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21.5%)과 생애주기 전반의 자립을 지원하는 평생·학제간 연계 교육(8.8%)의 비중은 현저히 낮다. 즉, 교육 현장 경험을 반영한 구체적 교수 방법 연구 및 학교 정규 교육 이후의 평생 교육이나 학제 간 연계 시스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주민이 실질적 역량을 갖추어 주체적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이고 연속적인 교육 모델에 대한 학술적 고찰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보건·의학 분야는 전체 학술 논문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보건·의학 분야의 세부 학문 분야별 현황

세부 분야	주요 포함 분야	빈도	비중
식품영양 및 생활과학	식품영양학, 지역사회영양학, 생활과학 등	15	34.1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	공중보건학, 예방의학, 보건사회학, 인구통계학 등	12	27.3
간호 및 모성보건	간호학, 모성보건학, 여성건강 연구 등	10	22.7
임상 및 재활의학	치의학, 소아치과, 안과학, 소아과학, 언어병리학, 재활의학 등	7	15.9
<b>합계</b>		44	100

보건학 연구들은 비록 전체 연구 분야에서 가장 낮은 비중이지만 일상적인 건강 관리와 예방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식품영양 및 생활과학(34.1%)이 가장 높은데 이는 이주민의 식생활 적응이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뤄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문적인 치료나 사후 관리를 다루는 임상 및 재활의학(15.9%)은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며,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27.3%)이나 간호 및 모성보건(22.7%)

역시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다. 이는 이주민들이 겪는 기초적인 질병 예방 관리, 만성 질환,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재활, 혹은 임신·출산과 같은 생애주기별 특수 의료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임상 연구와 체계적인 간호 지원책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보건학 연구는 ‘생활 건강’이라는 외연적 관리에 머물러 있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전문적인 의료 개입과 같은 심화된 보건의료 서비스 모델에 대한 학술적 고찰이 필요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인문·예술 분야는 비평적 해석과 사회문화적 탐구를 중심으로 연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구체적 현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인문·예술 분야의 세부 학문 분야별 현황

세부 분야	주요 포함 분야	편수	비중
비평 및 문학연구	현대문학, 비평, 영화학, 국어국문학, 비교문학 등	63	37.1
인류학 및 문화연구	문화인류학, 민속학, 문화학, 지리학, 사회학 등	55	32.3
예술치료 및 인문정신	미술치료, 신학, 철학, 윤리학, 예술심리학 등	33	19.4
디자인 및 생활과학	의류학, 패션디자인, 공간·도시디자인, 소비자학 등	19	11.2
<b>합계</b>		17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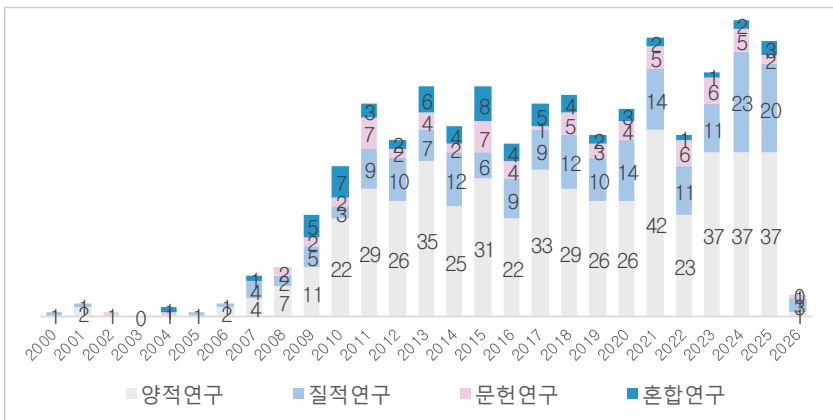
세부 분야별로 보면 인문·예술 분야는 비평 및 문학연구(37.1%)와 인류학 및 문화연구(32.3%)가 전체의 69.4%로 이주민의 서사 분석과 문화적 정체성 규명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이주민 집단의 문학적 기록이나 문화적 동화 현상을 해석하는 데 연구 역량이 편중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심리적 치유를 지원하는 예술치료 및 인문정신(19.4%)과 일상적인 주거 및 생활 환경을 다루는 디자인 및 생활과학(11.2%) 연구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이는 인문·예술 분야 연구가 주로 과거의 기록이나 문화 현상을 관조하고 해석하는 데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심리적

회복을 돕는 실천적·응용적 예술 연구로의 학술적 확장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지금까지 각 분야의 연구는 재한 중국 이주민의 삶을 다각도로 조명하려 하였으나 이주민의 초기 적응과 생존이라는 시급한 과제와 같은 특정 영역에 편중된 한계도 동시에 나타난다. 사회과학과 교육학은 제도 안착과 심리 지원에 매몰되어 내부 갈등이나 생애주기 전반의 역량 강화 연구가 부족하며, 보건학과 인문·예술 또한 기초 예방이나 텍스트 해석에 머물러 전문 치료 모델 구축 및 실천적 환류 연구로 나아가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주민의 정주화와 질적 삶의 지표를 포괄하는 보다 세밀하고 다변화된 연구 접근이 요구된다.

### 3.1.3. 연구 방법 연도별 추이와 특성

재한 중국 이주민 연구의 학술적 설계와 접근들을 파악하기 위해 4개로 분류한 연구방법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에 대한 연도별 추이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도별 연구 방법 현황(2000~2026.01)

분석 결과, 현재 연구방법은 초기 문헌 중심 연구에서 양적 분석의 안정적 지속과 질적 탐구의 확산이 병행되는 방법론적 심화 단계에 진입해 있다. 첫째, 양적 연구(455편, 54.1%)는 2000년대 초반 연간 1~

3편에 불과했으나 2011년(30편)과 2013년(32편)을 기점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유학생 유입 및 다문화 2세의 공교육 진입 시기와 맞물려 대규모 설문 조사를 통해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결과로 보인다. 또한 2021년(34편)과 2024년(37편)의 수치는 양적 분석이 학계의 표준 방법론으로 자리 잡고, 분석 틀이 고도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변인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통계 모델 연구(남순현 2021; 송안나 외 2021)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둘째, 질적 연구(249편, 29.6%)는 초기 미미한 수준에서 2013년(14편) 이후 두 자릿수를 유지해 왔으며, 2024년(22편)과 2025년(25편)에는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런 추세는 통계적 보편성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이주민 개별 집단의 내러티브와 구체적인 정착 경험을 심층 분석하려는 학술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문헌 연구(94편, 11.2%)와 혼합 연구(43편, 5.1%)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질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준다. 우선 문헌 연구는 초기 법·제도적 제언(이윤희 2004) 중심에서 최근 기존 성과를 통합하는 메타 분석(전연화 외 2024)으로 고도화되었다. 또한 2009년 이후 등장한 혼합 연구(5.1%)는 양적 통계와 질적 면담을 결합해 단일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비중은 낮으나 수치 데이터가 놓치기 쉬운 이주민의 구체적 맥락을 보완하며 방법론적 다변화를 보여준다. 이는 연구 체계가 보다 입체적이고 성숙한 분석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다음으로 각 연구방법론이 이주민의 삶을 이론화하거나 수치화하는 학문적 정교함을 확인하고자, 분석 목적과 데이터 성격에 따라 연구 유형을 네 가지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양적 연구 455편에 적용된 세부 분석 기법의 분포와 특징은 아래 <표 11>과 같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설문조사 기반의 통계 분석'(38.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 다문화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파악의 영향으로 이후 현황 진단 중심의 연구가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1〉 양적 연구방법 유형별 통계 현황

연구방법 유형	연구방법	편수	비중
설문조사 기반 통계분석	설문조사, 기술통계, 교차분석, t-test, 카이 검정, 상관분석 등	176	38.7
회귀·계량 통계분석	다중회귀, 선형회귀, 위계적 회귀, 로지스틱 회귀, 로짓, Ordered Probit, Heckman 등	160	35.2
구조방정식 및 고급 통계모형	구조방정식모형, 구조방정식 모델링, 경로분 석, 매개효과 분석, 요인분석, Rasch 등	85	18.7
대규모 데이터· 빅데이터·실험 연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패널데이터, 전수 자료 분석, 텍스트마이닝, 의미연결망, 실험 설계 등	34	7.4
<b>합계</b>		455	100

특히 ‘회귀·계량 분석’(35.2%)이 설문기반 분석과 비슷한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주목할만하다. 이는 단순 현황 파악을 넘어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구조방정식 및 고급 모형’(18.7%)의 비중으로, 분석 기법의 고도화와 이론적 모델링도 시도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대규모 데이터와 빅데이터·실험연구’(15.6%)는 가장 낮는데,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외연 확장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설문 데이터에 의존하는 연구 관행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자의 개입 없이 실제 행동 패턴과 장기적인 삶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빅데이터 및 패널 데이터 활용을 통해, 보다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다문화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질적 연구 249편의 분류 현황은 아래 〈표 12〉와 같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질적 면담 및 주제 분석’(36.5%)이 가장 비중이 높다. 이는 이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공통된 경험의 핵심 주제를 도출하는 방식이 질적 연구의 주류임을 보여준다. 이어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성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현장 및 사례 맥락 연구’(24.5%)와 이주민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분석하는 ‘해석적 및 구성적 연구’(21.7%)가 뒤를 이었다.

〈표 12〉 질적 연구방법 유형별 통계 현황

연구방법 유형	연구방법	편수	비중
일반 질적 면담 및 주제 분석	심층면담, FGI, 주제분석, 개방코딩, CQR, 내용분석 등	91	36.5
현장 및 사례 맥락 연구	질적 사례연구, 민족지, 참여관찰, 실행 연구, 현지조사 등	61	24.5
해석적 및 구성적 연구	내러티브, 생애사, 텍스트·담론 분석, 기호학, 비평 등	54	21.7
전문 분석론적 연구	현상학(Giorgi, Colaizzi), 근거이론, 개념 맵핑 등	43	17.3
<b>합계</b>		249	100

반면, 근거이론이나 담론 분석 등 고도화된 틀을 적용하는 ‘전문 분석론적 연구’(17.3%)는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질적 연구가 주로 현황 파악이나 기초적인 경험 기술에 머물러 있으며, 현상의 이면에 대한 분석 기법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미진함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질적 연구는 이주민의 개별적 삶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단순한 면담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현상을 관통하는 고도의 분석적 통찰을 보여 줄 수 있는 전문 기법의 확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문헌 연구 92편의 분류 현황은 아래 〈표 13〉과 같으며, 결과 ‘이론적 고찰 및 비판적 담론 분석’(41.3%)이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이는 재한 중국 이주민을 둘러싼 사회적 시각이나 학술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가 문헌 연구의 핵심이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법·제도 및 정책분석’(26.1%)과 ‘현황 및 사례 비교 분석’(20.7%)은 각각 이론적 논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할 실무적 가이드라인 및 국가 간 비교 연구가 현저히 부족함을 시사한다. 특히 현안의 즉각적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보다 원론적 비평에 치우쳐 있어, 실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연구의 확충이 필요하다.

반면, 기존 연구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체계적 및 텍스트 데이터 분석’(11.9%)은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개별적인 정책 비평이나

〈표 13〉 문헌 연구방법 유형별 통계 현황

연구방법 유형	연구방법	편수	비중
이론적 고찰 및 비판적 담론 분석	법령 변화 실증 분석, 역대 정부 정책 고찰, 지자체 의회 회의록 분석, 정책 비평 및 추진 체계 분석 등	38	41.3
법·제도 및 정책분석	법령 변화 실증 분석, 역대 정부 정책 고찰, 지자체 의회 회의록 분석, 정책 비평 및 추진 체계 분석 등	24	26.1
현황 및 사례 비교 분석	통계 기반 현황 분석, 국가/도시 간 사례 비교, 전략 모델 제언, 실태 분석 및 과제 도출 등	19	20.7
체계적 및 텍스트 데이터 분석	체계적 문헌고찰(SR), 주제범위 고찰(Scoping), 통합적 문헌고찰, 텍스트/내용 분석(전수조사) 등	11	11.9
<b>합계</b>		92	100

이론적 고찰에 비해, 지금까지 축적된 방대한 연구 성과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리하는 메타 분석이나 텍스트 마이닝 등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헌 연구는 이주민 사회의 이론적 토대와 정책적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해 왔으나, 향후 파편화된 연구 결과들을 하나로 정리하는 체계적 통합 분석으로의 학술적 확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혼합연구 13편의 분류 현황은 아래 〈표 14〉와 같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설문 및 면담 병행 연구’(71.1%)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양적 통계의 보편성과 질적 면담의 심층성을 결합하는 방식이 혼합 연구의 주된 형태임을 보여준다.

반면, 이론적 모델의 실효성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현장 적용 및 실험 혼합 연구’(17.8%)와 거시적 통계와 미시적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이터 기반 심층 분석 연구’(6.7%)는 두 항목을 합쳐도 ‘설문 및 면담 병행 연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나타났다. 게다가 전문가 합의나 정책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 목적 혼합 연구’(4.4%) 또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4〉 혼합 연구방법 유형별 통계 현황

연구방법 유형	연구방법	편수	비중
설문 및 면담 병행 연구	설문조사 + FGI/심층면담, 양적 실태조사 + 질적 사례 분석 병행 등	32	71.1
현장 적용 및 실험 혼합 연구	모형 개발 + 현장 적용 및 효과 검증, 프로그램 실시 + 설문/검사 병행 등	8	17.8
데이터 기반 심층 분석 연구	정부 정책/통계 분석 + 심층 면담, KICS 통계 + 현장 인터뷰 병행 등	3	6.7
특수 목적 혼합 연구	델파이 조사(전문가 합의), 글로벌 에스노그래피(다국적 축적 데이터 분석) 등	2	4.4
<b>합계</b>		45	100

따라서 향후에는 단순한 방법론적 결합을 넘어,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거나 정교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입체적인 융합 설계의 비중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이상의 총 841편의 연구방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연구 방법 유형별 종합 분포 현황

연구방법 대분류	세부범주	편수	비율	소계
양적연구	① 설문조사 기반 통계분석	176	38.7	455 (54.1%)
	② 회귀·계량 통계분석	160	35.2	
	③ 구조방정식 및 고급 통계모형	85	18.7	
	④ 대규모 데이터·빅데이터·실험 연구	34	7.4	
질적연구	① 일반 질적 면담 및 주제 분석	91	36.5	249 (29.6%)
	② 현장 및 사례 맥락 연구	61	24.5	
	③ 해석적 및 구성적 연구	54	21.7	
	④ 전문 분석론적 연구	43	17.3	
문헌연구	① 이론적 고찰 및 비판적 담론 분석	38	41.3	92 (11.0%)
	② 법·제도 및 정책 분석	24	26.1	
	③ 현황 및 사례 비교 분석	19	20.7	
	④ 체계적 및 텍스트 데이터 분석	11	11.9	

연구방법 대분류	세부범주	편수	비율	소계
혼합연구	① 설문 및 면담 병행 연구	32	71.7	45 (5.3%)
	② 현장 적용 및 실험 혼합 연구	8	17.8	
	③ 데이터 기반 심층 분석 연구	3	6.7	
	④ 특수 목적 혼합 연구	2	4.4	
합계		841	100	841 (100%)

연구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전체의 54.1%를 차지하는 양적 연구 중에서도 설문 기반 분석(38.7%)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일차 데이터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질적 연구(29.6%)에서는 일반 면담(36.5%) 비중이 높지만, 사례 연구와 해석적 연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이주민의 개별 서사를 다각도로 포착하려는 시도들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문헌 연구의 체계적 분석(11.9%)과 혼합 연구의 데이터 기반 심층 분석(6.7%) 비중이 가장 낮다. 이는 지난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메타적 연구’가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준다.

### 3.2. 연구 대상의 국적 및 이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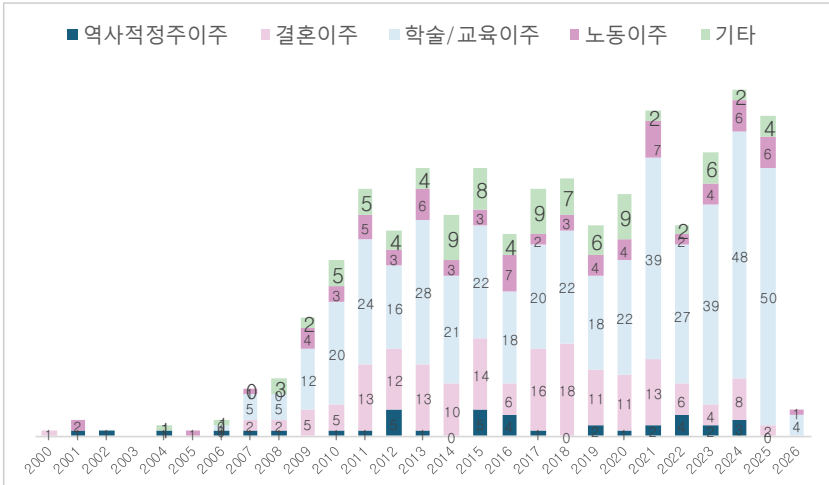
연구 대상의 국적과 이주 유형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체류 배경을 파악한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연구 편중성을 확인하고, 이주 목적에 따른 연구의 다양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 3.2.1. 출신국적 및 이주 유형별 현황

재한 중국 이주민 연구에서 이주 배경의 다변화에 따른 연구 대상의 확장성과 학술적 관심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된 분류 체계에 따라 시기별 이주 유형 연구 추이를 살펴보겠다. 아래 <그림 4>는 이주 유형에 따른 연도별 게재 편수이다.

유형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술·교육 이주 연구가 461편(54.8%)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결혼 이주 172편(20.5%), 노동 이주 77편(9.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사적 정주 이주는 38편(4.5%)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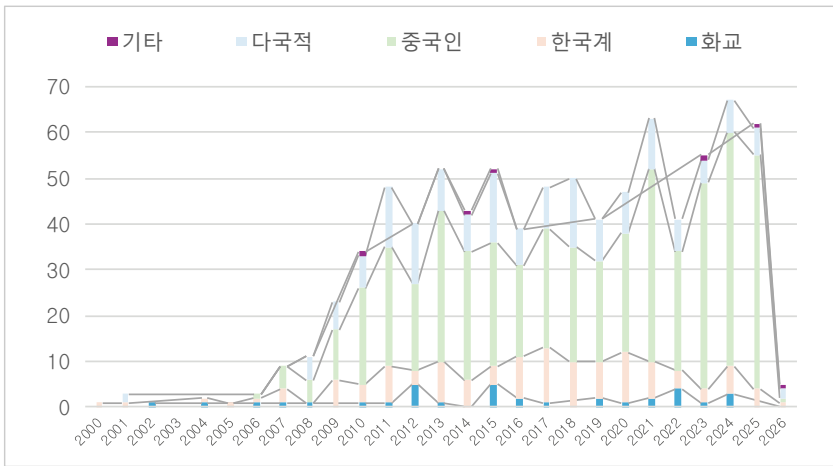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이주유형 논문 수(2000~2026.01)

초기 연구는 2000년대 중반까지 역사적 정주 이주민 화교 집단의 정체성 및 생애사(38편)와 노동 이주 초기 실태(77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이후 결혼 이주 연구가 급증하며 2013년(13편)과 2015년(14편)에 정점을 보였으나, 2020년대로 넘어오며 상대적인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결혼이주 연구가 초기 적응과 가족 갈등이라는 특정 담론에 집중되어 정주 이후의 다양한 생애 과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 2010년대를 기점으로 학술·교육 이주 연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48편, 50편에 이르렀다. 특히 학술·교육 이주 연구가 노동이주에 비해 6배 이상 많은 것은, 이주민 사회 전반의 균형 있는 학술적 조명보다는 접근이 쉬운 집단에 연구가 편중된 결과라 하겠다.

종합하면, 재한 중국 이주민 연구는 학술·교육 이주에 편중되어 있

으며, 정주화된 결혼 이주민의 사후 관리와 노동 이주민의 권리 담론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유형의 ‘적응’ 연구를 넘어, 소외된 집단의 구조적 공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술적 지평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재한 이주 중국인 연구의 민족적·국가적 정체성에 따른 연구 비중과 시계열적 변화 양상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연도별 국적유형 논문 수(2000~2026.01)

국적별 연구는 중국인(511편, 60.8%) 연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다국적(166편, 19.7%)과 한국계 중국인(124편, 14.7%) 연구가 뒤를 잇고 있다. 초기 연구는 한국계 중국인과 화교(34편, 4.0%)를 중심으로 이들의 정체성과 초기 정착 과정을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2010년대 이후 정책적 변화에 따라 연구 대상이 급격히 전환되었다. 특히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다국적 연구가 연평균 11편으로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재한 중국 이주민을 독립적 주체로 조명하기보다, 보편적인 다문화 정책 맥락에서 타 국적 이주민과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경향이 강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201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인 대상 연구가 비약적으로 급증하여

2024년(51편)과 2025년(51편)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과거 한국계 중국인 중심의 학술적 관심이 중국인 유학생 집단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비해 화교를 대상으로 한 역사적·인류학적 접근은 초기(2000~2007)와 최근(2022~2024)에 간헐적인 수치를 보일 뿐, 전체 연구 지형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중국인 대상 연구의 압도적 비중은 유학 중심의 이주 유형 변화를 수치적으로 반영할 뿐, 다문화 정책의 질적 도약이나 수용 체계의 실효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연구 접근이 용이한 특정 집단에 연구가 집중된 결과이며, 이주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논의의 확장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다음으로 재한 이주 중국인 연구의 대상적 특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주 유형과 국적을 연계한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특정 이주 경로와 민족적·국가적 배경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현재까지의 연구의 초점이 특정 조합(예: 결혼이주-한국계 중국인)에 편중되어 있는지 혹은 학술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 그 세밀한 지형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아래 <표 16>과 같다.<sup>9)</sup>

초기에 ‘결혼이주-다국적(비교)’ 중심이었던 연구 지형이 최근에는 ‘학술·교육이주-중국인’ 연구로 뚜렷하게 이동하고 있다. 우선 ‘학술·교육이주와 중국인’ 결합 연구(429편)가 전체 연구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연구 축으로 부상했다. 이 유형은 2010년(20편)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1년(36편)이후 급격히 확대되어 2024~2025년에는 각각 46편과 47편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결혼이주와 다국적’ 연구(102편)는 초기 연구 지형을 형성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2011부터 2015년 사이에 매년 두 자릿수의 높은 빈도를 유지하며 활발히 연구되었으나, 이는 중국인 여성을 독립된 주체로 조명했다기 보다는 보편적인 다문화 정책을 안에서 타 국적자와 비교하는 ‘정책 대상화’ 연구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9) 아래 <표 16>의 이주 유형에서의 기타는 이주 동기를 체류 양상의 복잡성과 연구 주체의 다변화로 인해 단일 범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고, 국적에서의 기타는 한국인의 이주자(중국의 동남아 포함) 인식(pp.7-8의 2.2.2 연구대상 분류 기준 참고).

〈표 16〉 재한 중국인 이주유형 및 국적별 연구 동향 교차분석 (2000-2026.01)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총계
이주유형+국적	0	1	1	0	1	0	1	0	1	0	1	1	6	1	0	4	2	1	0	2	1	2	4	1	3	0	0	34
역사적정주+주+화교	1	0	0	0	0	0	2	0	0	2	0	2	1	1	0	5	4	1	3	1	1	0	0	0	0	0	0	24
결혼이주+한국계중국인	0	0	0	0	0	0	0	0	0	1	1	2	4	2	2	0	3	6	5	6	4	3	2	5	1	0	0	47
결혼이주+중국인	0	0	0	0	0	0	2	6	4	10	9	7	7	11	6	8	8	6	2	8	2	2	2	3	1	0	0	102
결혼이주+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학술·교육이주+한국계중국인	0	0	0	0	0	0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0	0	0	1	0	0	4
학술·교육이주+중국인	0	0	0	0	0	1	5	4	11	20	24	16	27	19	21	17	19	17	16	18	36	23	40	46	47	2	0	429
학술·교육이주+다국적	0	0	0	0	0	0	0	1	0	0	0	0	2	1	1	0	5	2	4	3	4	0	1	3	2	0	0	29
학술·교육이주+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노동이주+한국계중국인	0	0	0	0	1	0	1	0	4	2	4	2	4	3	0	7	1	2	3	3	6	2	2	5	4	1	0	57
노동이주+중국인	0	0	0	0	0	0	0	0	0	0	0	1	1	0	2	1	1	1	0	0	1	0	2	0	0	0	0	10
노동이주+다국적	0	2	0	0	0	0	0	0	0	1	1	0	1	0	1	1	0	0	0	1	0	0	1	1	2	0	0	12
노동이주+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한국계중국인	0	0	0	0	1	0	1	0	1	2	1	2	4	4	2	4	4	5	1	1	1	1	1	1	0	0	0	42
기타+중국인	0	0	0	0	0	0	0	0	0	0	2	0	1	4	1	2	2	1	1	2	1	0	1	0	3	0	0	21
기타+다국적	0	0	0	0	0	0	1	2	0	2	2	3	1	0	3	0	1	2	1	2	0	1	2	2	1	0	0	26
기타+기타	0	0	0	0	0	0	0	0	0	1	0	0	1	1	0	0	0	0	0	0	0	0	0	1	0	0	0	4
연도별 합계	1	3	1	0	2	1	3	9	11	23	34	48	40	52	43	52	39	48	50	41	47	63	41	55	67	62	5	841

반면 ‘결혼이주와 중국인’이나 ‘결혼이주와 한국계 중국인’이 결합된 연구(71편)는 2017년 이후 일정한 빈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연구가 보편적 현황 파악 위주의 다국적 비교 단계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즉, 가족 단위의 문화적 특수성과 정주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 경향의 전환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결혼 이주 연구는 정책적 범주화를 넘어 중국 이주민 집단 고유의 삶의 궤적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점차 그 성격이 재편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계 중국인의 ‘노동 이주’ 유형 연구(58편)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한국계 중국인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이들이 겪는 고용 차별, 권리 담론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장기적인 과제로 안착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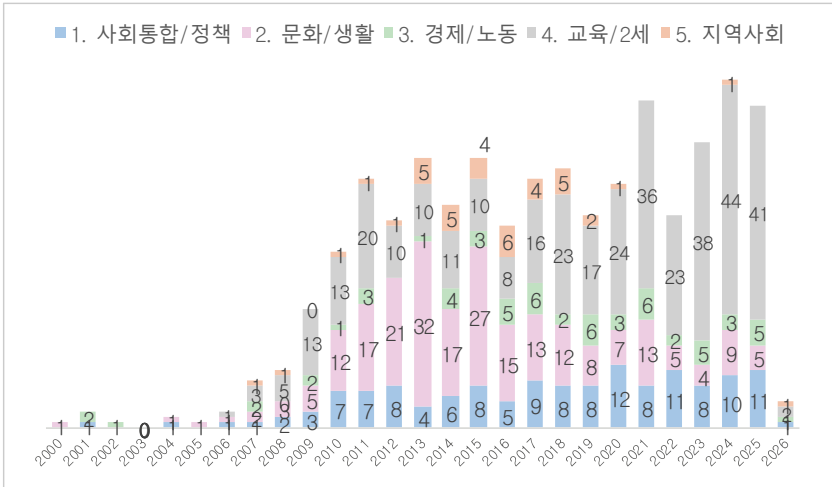
### 3.3. 주요 연구 주제 및 적응 층위 분석

여기서는 재한 중국 이주민 연구의 주요 주제와 국적·이주 유형별 사회적 적응 층위의 상관관계 분석한다. 이는 개별 연구들이 주목해 온 이주민의 적응 영역이 집단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연구 공백 지점을 확인하여 향후 연구의 지향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이다.

#### 3.3.1. 5대 연구 주제의 시계열적 추이

재한 중국 이주민 연구 주제의 시기별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다섯 가지 핵심 주제로 구분하여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아래 <그림 6>과 같다.

‘교육·2세’(368편, 43.8%)와 ‘문화·생활’(231편, 27.5%) 두 주제가 전체 연구의 71.3%로, 학계의 주된 관심사가 이주민의 교육과 실생활 적응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들은 주로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 적응과 이들의 캠퍼스 밖 일상과 한국 문화 수용 과정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중 ‘교육·2세’는 2009년 13편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표 16>의 국적·이주유형별 연구 논문 추세에서 ‘학술·교육이주와 중국인’에 대한 연구가 2009년에 전년



〈그림 6〉 5대 주제별 논문의 연도별 추이(2000~2026.01)

4편에서 11편으로 급증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sup>10)</sup>

반면, 이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같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제의 연구들은 매우 저조하여, 향후 이주민 연구들이 유학생의 교육과 생활을 넘어 이주민의 전체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기반 연구로의 외연 확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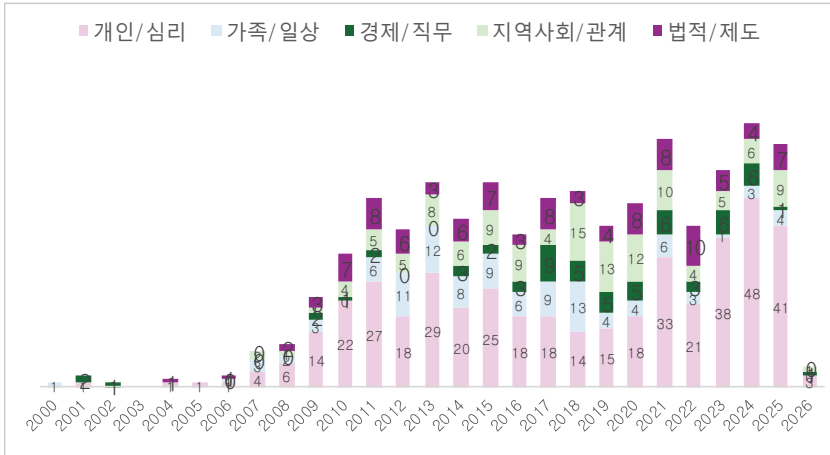
### 3.3.2. 적응 층위별 분포 특성 분석

이주민의 적응과 관련해 어떤 연구가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적응 층위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5대 적응 층위의 연도별 논문 추이는 아래 〈그림 7〉과 같다.

‘개인·심리’(436편, 51.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역사회·관계’(129편, 15.3%), ‘가족·일상’(109편, 13.0%), ‘법·제도’(104편, 12.4%), ‘경제·직무’(63편, 7.5%) 순으로 나타나 개인의 심리적 기제와 정체성 형성이 주요 연구 주제였음을 보여준다.

시기별로는 2011년(34편)을 기점으로 양적 확대가 본격화되었으나,

10) 이외에 유일하게 가시적인 증가세를 보인 연구는 ‘결혼이주와 다국적’에 대한 연구로 2008년 2편에서 2009년 6편으로 소폭의 증가했다.



〈그림 7〉 5대 적응 층위로 구분된 논문의 연도별 편수(2000~2026.01)

층위별로 상이한 흐름이 확인된다. ‘개인·심리’는 2023년(48편)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구의 핵심 분야로 확고히 자리 잡은 반면, ‘가족·일상’은 2013년(12건)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 내지 정체 국면을 보였다. ‘지역사회·관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매년 10건 내외의 안정적인 분포를 나타냈으며, ‘법적·제도’ 연구는 2021년(10건) 이후 매년 5~7건 수준을 유지하며 제도적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적응의 핵심 지표인 ‘경제·직무’ 연구는 63건(7.5%)에 그쳐 5개 층위 중 가장 낮은 비중이었다.

종합하면, 재한 중국 이주민 연구는 개인·가족 차원의 미시적 접근에서 지역 사회 및 제도 차원으로 확장되어 왔으나, 실질적 자립과 직결되는 ‘경제·직무’ 영역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심리·관계적 적응을 넘어 경제적 주체로서의 삶과 직무 적응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3.3.3. 국적·이주유형과 적응 층위의 상관관계

재한 중국 이주민 연구가 어떠한 대상에게 어떤 차원의 적응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파악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연구 공백 지점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국적·이주유형에 따른 5대 적응층위를 교차 분석하

였다.<sup>11)</sup> 해당 내용의 분포 현황은 <표 17>과 같다.

재한 중국 이주민 연구는 특정 집단과 미시적 적응 영역에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 첫째, ‘학술·교육이주’에 대한 편중이 두드러진다. 전체 연구의 절반 이상인 54.8%(461편)가 유학생 중심의 ‘학술·교육이주’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들의 ‘개인·심리적응’연구가 342편(4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적응 층위의 불균형이 나타난다. 5대 층위 중 ‘개인·심리 적응’(51.5%) 연구가 절반이 넘는 반면,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경제·직무 적응’연구는 58편(6.9%)에 그치며 모든 이주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셋째, 역사적 이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재한 중국 이주민의 중요한 축인 ‘역사적 이주’ 관련 연구는 4.4%(37편)에 불과해 학술적 관심이 가장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표 17> 국적·이주유형과 5대 적응층위

적응층위/ 이주유형	개인· 심리적응	가족· 일상적응	경제· 직무적응	지역사회· 관계 적응	법·제도 적응	이주 유형 합계
역사적 이주	15 (1.8%)	3 (0.4%)	2 (0.2%)	6 (0.7%)	11 (1.3%)	37 (4.4%)
결혼이주	47 (5.6%)	50 (5.9%)	12 (1.4%)	37 (4.4%)	27 (3.2%)	173 (20.6%)
학술· 교육이주	342 (40.7%)	31 (3.7%)	16 (1.9%)	42 (5.0%)	30 (3.6%)	461 (54.8%)
노동이주	13 (1.5%)	14 (1.7%)	16 (1.9%)	15 (1.8%)	17 (2.0%)	75 (8.9%)
기타	16 (1.9%)	18 (2.1%)	12 (1.4%)	27 (3.2%)	22 (2.6%)	95 (11.3%)
적응층위합계	433 (51.5%)	116 (13.8%)	58 (6.9%)	127 (15.1%)	107 (12.7%)	841 (100%)

11) 국적과 이주 유형을 종합한 후 다시 5대 적응 층위와 관련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종합하면, 그동안 재한 중국 이주민 연구가 이주민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기보다 사회적 필요에 따른 특정 정책 대상인 유학생이나 결혼이주자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주민을 정주 주체로 인식하고, 전체 이주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과 직업적 성취를 포함한 거시적 적응 차원으로 연구 지평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 4. 결론

본 연구는 지난 26년간 발표된 재한 중국 이주민 관련 학술연구논문 841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문 분야에 있어 사회과학(70.4%)과 교육학(15.9%)에 편중된 연구는 이주민의 제도적 안착과 심리적 적응에 기여해 왔으나, 학문 간 불균형을 드러냈다. 특히 생존과 관련된 보건·의학(3.5%)과 정체성을 다루는 인문·예술 분야(10.2%)의 상대적 소외는 이주민의 정주 안정과 삶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다학제적 균형과 실천적 접근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방법은 양적 분석의 높은 비중 속에서 질적 탐구의 비중이 확대되는 양적·질적 병행 구조를 나타낸다. 전체의 54.1%를 차지하는 양적 연구는 설문 기반 분석(38.7%)에 집중되어 있으며, 질적 연구(29.6%)는 면담을 중심으로 사례 및 해석적 접근이 병행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문헌 연구(11.9%)와 혼합 연구(6.7%)의 비중은 낮아, 기존 연구를 통합·재해석하는 메타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단일 방법론의 반복을 넘어 축적된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데이터 기반의 다층적 분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 주제와 연구 대상이 교육 및 유학생 적응에 편중되어 있다. 연구 주제의 경우 '교육·2세'(43.8%)와 '문화·생활'(27.5%)에 71.3%가 집중되어 있어, 이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경제적 자립이나 지역사회 기반의 연구는 매우 저조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이주민 전

체의 경제적 능력과 지역의 정주 여건에 대한 방향으로 연구 주제와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넷째, 적응 층위는 ‘개인·심리’(51.8%) 연구에 편중되었으며, 정주 안정의 핵심인 ‘경제·직무’(7.5%) 연구는 모든 이주 유형에서 거의 없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고령화, 정신건강, 평생교육 및 직업 역량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세밀한 접근으로 학문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주민의 정주와 삶의 질을 실천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학문적 사각지대를 규명하여 재한 중국 이주민을 시혜적 수혜 대상이 아닌 ‘자립적 정주 주체’로 정립하기 위한 학술적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향후 연구는 이주민의 ‘사회적 기여와 공존’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역량 강화 모델’로 전환되어야 하며, 본 연구의 분석 지표가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혁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하라·도현심(2020). 유아기 첫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학회지> 29(4), 467-484쪽.
- 김민길·김영직·조민효(2016).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 국적별 임금 차별에 관한 연구: 옥사카(Oaxaca) 분해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5(4), 65-106쪽.
- 김수봉·심옥수(2013). 다문화 가족 미취학자녀의 보육·교육서비스 선호요인 비교 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7(3), 181-203쪽.
- 김은미·김지연(2008). 다인종·다민족 사회의 형성과 사회 조직: 서울의 외국인 마을 사례, <한국사회학> 42(2), 1-35쪽.
- 김진희(2024). 이주민 노인의 생활세계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3(6), 83-112쪽.
- 김현숙(2015).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영향요인과 민족적 차이, <한국사회정책> 22(2), 163-193쪽.
- 나동석·박종인(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과 양육행동에 관

- 한 연구, <가족과문화> 21(4), 1-20쪽.
- 남순현(2021). 중국유학생의 우리성과 정이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체면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인간발달학회> 28(3), 21-40쪽.
- 박상순(2006). 재한화교의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소고 -특히, 국내법 적용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조> 55(11), 242-281쪽.
- 박세훈 · 정소양(2010).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64 59-76쪽.
- 박주연 · 한경근(2019). 중국계 다문화가정 장애학생 학부모의 초등학교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 <특수교육연구> 26(2), 163-186쪽.
- 박혜숙 · 전명남(2011).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학업적 효능감, 동기조절전략, 성별의 관계 비교, <교육문제연구> (41), 149-176쪽.
- 송안나(2021). 국내 문화예술경영 대학원 교과과정 발전방안 : 중국인 유학생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상품학연구> 39(3), 55-64쪽.
- 여성가족부(2025.05).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유정균 · 김두섭(2013). 혼인이주여성의 상하이동 인식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6(2), 45-67쪽.
- 이경상 · 배상률(2018).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사회 생활적응 및 한국사회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5(5), 231-264쪽.
- 이보람(2025).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 및 사회통합 경험에 대한 통합적 문헌 고찰, <다문화교육연구> 18(2), 37-60쪽.
- 이수상 · 위성광(2009). 중국 유학생의 대학도서관 포털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4), 113-134쪽.
- 이윤희(2004). 동북아 시대 인천 거주 화교의 인권 실태 및 정체성, <담론201> 6(2), 5-34쪽.
- 이재분 · 이해영 · 김혜원(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교육지원을 위한 핵심역량 현황 및 인식, <한국교육> 36(2), 3-29쪽.
- 이종구 · 임선일(2011). 재중동포의 국내 정착과 취업네트워크, <산업노동연구> 17(2), 309-330쪽.
- 이종열 · 범령령(2010). 한국 다문화 관련 행정서비스의 대응성에 관한 연구: 중국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2), 225-247쪽.
- 이진영 · 김판준(2009). 다문화 시대 국제이해와 중국동포와의 교육 협력, <국제이해교육연구> 4(1), 57-85쪽.
- 장갑수(201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 · 출산과 자녀양육, <다문화화콘텐츠연구> (14), 341-365쪽.
- 전연화 · 권혁진 · 신윤진(2024). 중국인 유학생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메타분석, <다문화콘텐츠연구> (49), 319-361쪽.

- 정기선(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20), 68-103쪽.
- 조선주 · 안주희(2020).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세 가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105(2), 69-103쪽.
- 조용완 · 이수상(2010).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현황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1), 75-99쪽.
- 채덕희 · 김나경 · 아사미 게이코(2024). 중국동포와 베트남 귀화 이주민의 주관적 건강에 대한 예측요인: 민족과 젠더의 영향을 중심으로, <다문화건강학회지> 14(2), 1-16쪽.
- 최혜지(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163-194쪽.
- 법무부(2025). 외국인 통계자료,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검색일: 2026.02.05.)
- 연합뉴스(2008). 외국인 유학생 2012년 10만명 유치, <https://buly.kr/7bljt1a> (검색일: 2026.02.10.)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en, A.(1985). Well-being, Agency and Freedom. *The Journal of Philosophy*, 82(4), 169-221.
- Sen, A.(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ger, A., & Strang, L.(2008). Understanding Integration: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Refugee Studies*, 21(2), 166-191.
-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필자 소개

성 명 장지혜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이주다문화연구소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1526

전자우편 leslie1987@bufs.ac.kr

[www.kci.go.kr](http://www.kci.go.kr)

## Abstract

#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Chinese Migrants in Korea - Focusing on Domestic Academic Journal Articles from 2000 to 2026 -

Jang, Ji-hy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nalyzes trends in 841 academic articles on Chinese immigrants in Korea from 2000 to January 2026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multicultural research.

The results show research is concentrated in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wi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in parallel. However, the low share of literature and mixed methods indicates limited integrative perspectives. Research focuses on academic and educational migration (54.8%), especially individu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51.8%), while economic and occupational adaptation (7.5%) remains underexplored.

This study identifies research gaps and emphasizes 'foundational competencies' for immigrants' self-reliance, providing a basis for tailored multicultural policies.

**[Key words]** Chinese Immigrants in Korea, Adaptation Status, Research Trends, Migration Types, Foundational Competencies

투고일 2026. 02. 25 / 심사일 2026. 03. 23 / 게재확정일 2026. 03. 26